“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8.1.18(목)

Ⅰ.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
Ⅱ. 정책 추진과제
Ⅲ. 추진체계
Ⅳ. 업무혁신 과제(현장 노동청 운영)

고용노동부

I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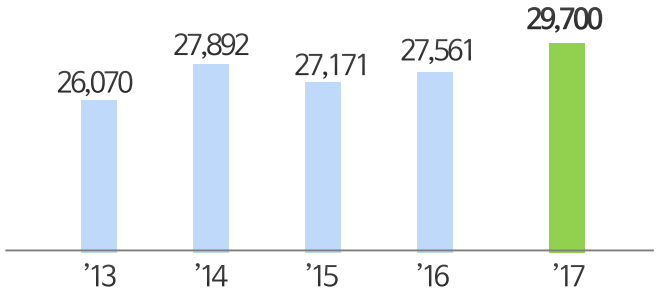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삶의 질 현황
2. 노동 현장의 목소리
3.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4.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삶의 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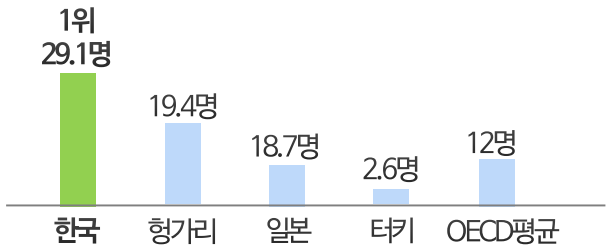
(2017년 기준, 일부 지표 제외)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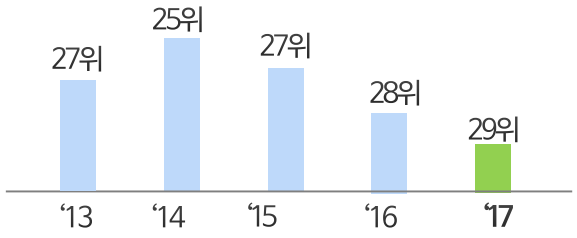
1인당 국민총소득(달러)



자살률(2016, OECD 38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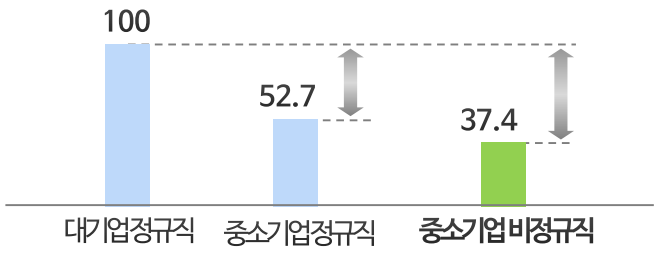


삶의 질 순위(2017, OECD 38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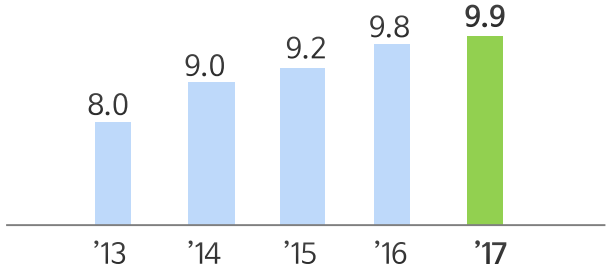


그간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였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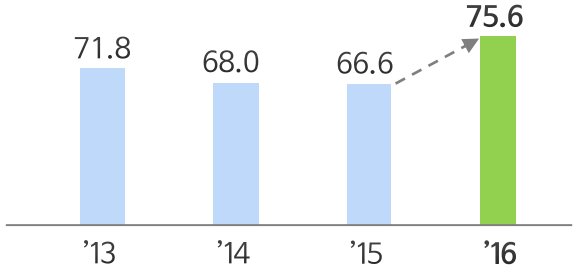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016, 노동부)



청년 실업률 (%, 통계청)



폐업 자영업자 규모(만명, 국세청)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국정전략으로 설정

노동 현장의 목소리

지난해, 17일간 전국 10곳에서 '현장 노동청' 운영('17.9.12~28),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제안 채택율: 65.7%, 진정 처리율: 82.0%)

노동자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희망 합니다. "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구직자

"대학 3학년 재학생입니다. **내년 졸업이 두렵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마련과 **지원**에 노력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을 충분히 받고 싶습니다."

영세사업주

"대형마트가 주변에 많이 생기면서 **고객이 많이 줄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가 많아 사업 **경영이 힘듭니다."**

이제, 국민들은 삶의 변화를 희망

'사람중심 경제'의 국정철학을 실천하고, 노동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양질의 일자리 ’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 연결고리’

문재인 정부 핵심 전략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및 핵심 생계비 감소 등 **가계부담 경감**으로 소비 및 내수 확대 지원 필요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 **규제 개혁, 산업 혁신** 및 **신산업 활성화, 융합형 인력 양성** 등 **‘혁신성장’**과의 연계도 필수적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향후 과제

'17년 성과

(1단계)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

-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국정 최우선 순위
  - 일자리 위원회 신설(위원장: 대통령)
  - 일자리 로드맵 발표
-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틀 마련

[최저임금 인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17년 목표 **7.4만명 전환 결정 완료**('18.1월 기준)

'18년 계획

(2단계) 소득주도성장 확산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

-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
-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격차해소

일을 찾는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기회 확대
- 청년·신중년 등 맞춤형 취업 지원
- 직업훈련, 고용·산재 보험 등 안전망 강화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 장시간 근로 개선
-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일과 생활의 균형

Ⅱ 정책 추진과제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주요 정책과제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 :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8년 236만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 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요건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 1개월이상 고용 유지 노동자
지원금액	1인당 13만원 지원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범정부적 홍보

고용부	•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팀 지역단위 사업주 밀착 홍보
중기부	• 지방청별 현장홍보 전담반 기업 방문·안내
행안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지자체별 TF, 읍면동 전담인력)

쉽고 편리한 신청

- 신청·접수 특별기간 운영 ('17.12월 ~ '18.2월)
- 전국 4천여개 오프라인 창구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운영
- 신청 업무 무료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두루누리) 확대

  * (대상)월 보수 140만원 → 190만원
  (수준) 보험료의 60% → 80~90%

- 건강보험료 50% 감면
- 4대 보험 신규 가입시 2년간 세액 공제

주요 정책과제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 : 최저임금 안착 지원

최저임금 준수 지도

-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 가동** ('18.1월~)
  - 모범 사업장 발굴·확산
- **全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18.1월~)
  - 불법·편법적 임금인상 사례 시정
- **취약업종 대상 3주간** ('18.1.8~1.28) **계도 후 집중 점검** ('18.1~3월)
  - 아파트, 편의점, 주유소 등 5천개소

최저임금 제도개선

- **「최저임금 委員會」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추진**

주요내용

-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 ▲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 ▲ 산입범위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분배개선효과
- ▲ 결정구조·구성
- ▲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주요 정책과제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차별해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속화

- **1단계 대상기관은 빠른 시간 내 전환 추진**
  ('17~'18년, 누적 15만명)

1단계	2단계	3단계
중앙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자회사 등	민간위탁 기관

- **표준인사관리규정**('17.12월 발표) **및 임금체계 표준모델 마련** (노사단체 협의 중)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 **사용사유 제한,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채용** ('18년~, 기간제법 개정 추진)
- **고용형태 공시제 개선**
  - 소속 외 노동자 업무내용 공시
-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재정·세제)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차별시정제도 개편**
  * 비교대상 노동자 범위 확대, 차별처우의 합리적 사유 축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고용 형태별 | 기업 규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해소

-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방안」 마련**
  (예) 하청 노동자 적정임금·산업안전 관리의 원청 책임 강화
- **관계부처 합동단속·점검**(계속)
  - 하도급 관행(부당한 대금인하 등)
  -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행 여부 등
- **원·하청 등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장·단기 실행 로드맵 마련** (관계부처 합동)

공정거래	- 적정 납품단가 보장 -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엄정 대응
상생협력	-대·중소 동반성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Ⅱ 정책 추진과제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기회 확대

> “일자리는
>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 개개인의 삶의 기반”
>
> 대통령 신년사(‘18.1.10)

중소 ·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5.6만명, 2천억원)**
- **산업단지 환경개선** * 참여부처(4 → 7개), 사업(9 → 20개)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18년 1천여개소) · **정보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 **혁신적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550팀)**
- 「**판로지원 특별법**」**제정**(국회 계류중)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민간기업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

- **고용의 양과 질이 우수한 기업 선정 · 인증**(약 110개소, ‘18.5월)
  * (가칭) 고용창출 모범기업, 좋은 일자리 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신중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청 년

'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 ⇒ 향후 3~4년간 집중 지원

-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 청년과 **함께하는 홍보**로 사업 참여 유도(청년 참여단, SNS, 학생회 연계 등)
- 일자리 **단계별 밀착 취업지원**

구직단계	채용단계	재직단계
• 청년구직촉진수당(19만명) • 청년취업성공패키지(21.5만명) • 직업훈련 및 일경험(12만명)	•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1.5만명) • 청년워크넷 알선취업(6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 5만명) • 청년 알바 등을 위한 소액체당금제 (확정판결요건 폐지, '18년 법개정 추진)

신중년

재 직

- 60세 정년제 현장 실천
-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신중년 적합직무 채용 지원
  ('18년 신설, 우선지원기업 1인당 80만원)

재 취 업

- 취업성공패키지 요건 한시적 완화 ('18.1월)
  (중장년) 중위소득 100% →
  (최저임금 실직자) 중위소득 120% 이하
- 자치단체 연계형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및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18년 신설)

주요 정책과제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型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신기술·신산업 훈련 확대

- 빅 데이터, IoT 등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산('18년 1천명)
- 중소기업 노동자 참여확대 (인센티브 강화)

공공부문 역할 강화

폴리텍
- 신기술 ·융합학과 중심 학과 개편 (매년 3개 신기술 학과 신설)

한기대
- 훈련교사 역량 개발, 소통형 훈련, 차세대 콘텐츠 개발 등 훈련 혁신

미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 유망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 및 자격종목 신설
  * 로봇SW개발, 3D 프린터 등
- 신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실업자 훈련

- 실업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또는 복귀 지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폴리텍 기능사 훈련,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등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재직자 훈련

- 중소기업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미래변화 대응 훈련
  * 사업주 훈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등
- 산업구조 변화, 노동자 수요 등을 반영한 전직훈련
  * 전직지원 상담 강화 및 적합 훈련과정 연계

주요 정책과제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18.上 법개정, '19년 중 시행)
  * 고용보험 제도 개선 전문가 TF 및 노사정 TF 논의 중 ('18.1~3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18.1월~, 창업 후 1년 이내 → 5년 이내)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급여확대] 지급수준 인상**(50→60%) **및 지급기간 연장**(30일 이상) *'18.7월~
  * 보험료율 조정 병행(노사 각 0.15%p 상향, '19.1월~)
- **[대상확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18→ 24개월, '18.7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단계적 확대 ('18.7월~)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출퇴근 재해] 업무상 출퇴근 재해 인정**('18.1월~)
- **[사각지대 해소] 특고 종사자,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적용 추진**
- **[보장성 강화]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과로 인정기준 60시간 → 52시간)

Ⅱ 정책 추진과제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주요 정책과제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 개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 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대통령 신년사('18.1.10)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추진

- 1주 68시간 →52시간
- 연장근로한도 미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10개 우선 추진)

컨설팅 지원

* 장시간근로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지도·감독 강화

* 주요 장시간 노동 업종, 노동시간특례업종 등 집중 근로감독(600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 노동자 신규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 ('18년 213억)

주요 정책과제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일·생활 균형 실현

- **일하는 문화·방식(정시퇴근 등) 혁신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18.下, 국회제출)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 **휴식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국민, CEO 인식개선 캠페인
  -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례 확산 등

- **휴일·휴가제도 개편 방안** 마련 ('18.6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시범 설치 ('18년 3개소)
  - **민간 직장어린이집**(매년 135개소 이상)

- **육아지원** 확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18.7월~) 첫째아 150 → 200만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추진**('19년) **6개월 이상 근무 시 허용**(기존 1년, '18.7월) **대체인력 지원 확대** ('18. 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연장 및 급여인상** 최대 1년 → 2년 임금의 60% → 80%

Ⅲ 추 진 체 계

1. 정책 추진 기반 마련
2. 국민에게 다가가는 고용노동행정

추진체계 1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사회적대화 활성화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 대통령 신년사('18.1.10)

중층적 대화체제 구축

중 앙	•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사 중심 원칙 하에 미조직 노동자 참여 확대 추진
지역·업종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업종·분야별 협의체 활성화
사업장	• 정규직·원청 중심 노사협의회 개선 * 원·하청 노사협의회 도입,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 강화

90%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 이해대변·권익보호

• 관련 단체 소통 정례화, 인프라 구축 및 정책 개발 연계

일자리 중심 정부 정책 확산

고용영향평가 확대·강화

대 상	• 일자리사업(전체), R&D, SOC, 조달사업(100억원 이상), 제·개정 법령('19년 시행 추진)
결과활용	• 고용효과 높은 사업에 예산 우선 투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 '17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구조 개편 등 효율성 제고

•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강화 (1/4분기 34.5% 이상 집행)

현장 중심 일자리정책 추진

• '고용노동 상황판' 본격가동

• 주요 현안 실시간 관리

추진체계 2

국민에게 다가가는 고용노동행정

근로감독행정 혁신

전략적·예방적 감독

전방위적 근로조건 준수 (예방감독) → 위반징후 사업장·업종 (기획감독) → 문제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 감독 대상 선정부터 결과까지 공정성 · 신뢰성 제고

감독 실효성 강화

- 원칙적 사법처리, 경각심 촉구
-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감독관 전문성 제고

- 고용노동직류로 감독관 신규채용 (`18년~)
-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 대폭 확충 (6주 → 12주)

고용센터 혁신

재취업 지원 강화

- 실업인정 제도 개편
- 직업상담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 고용복지+ 센터 내실화

일자리 발굴

- 지역 일자리 발굴 기능 강화
  * 전담팀 운영 등
-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등

정보 인프라

- '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 4차 산업혁명 인력수급 전망('18.2월)
- 유망 신직업 정보 제공 강화
  * 의료정보분석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2018 업무보고

업무혁신 과제

- 현장 노동청 운영

업무혁신 과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다

2017

2017 현장 노동청

현장노동청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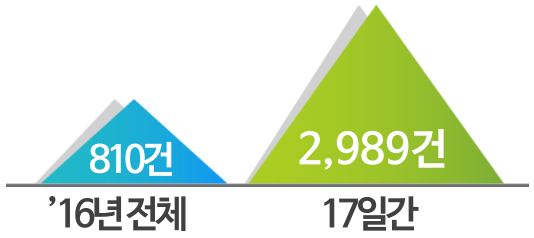
진정, 고소·고발 사건 등
실제 문제가 발생한 後 해결

도입 후 →

임금체불, 노사분규, 산재사고 등
문제 발생 前 사전 예방

전국 10곳, 17일간의 운영성과

- 제안·진정 및 현장상담 6,271건
- 국민제안 2,989건



- 제안·진정건의 **높은 채택·처리율**

- **진정 처리기간** 대폭 단축

2018

Re~start 현장 노동청

매년 5월 정기적 운영

분야
- 고용노동행정 전 범위
- 특히 청년층 집중

방식
- 정책 대상, 지역별·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 지역 · 기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

제안 및 진정의 신속한 처리

- e-현장노동청 운영
- 신청된 제안은 신청인에게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통보

‘일자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하여,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